

# 신한국시대 여는 잡지언론의 개혁과 위상

## 한국잡지협회 주최 제13회 잡지세미나 지상중계

한국잡지협회(회장 김수달)는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속초시 설악파크호텔에서 '신한국시대를 열어가는 잡지언론의 개혁과 위상'을 주제로 제13회 잡지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의 잡지 발행인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 세미나에서는 정진석교수(외대 신문방송학)가 「한국잡지언론의 위상과 역할」을, 이광재 교수(경희대 신문방송학)가 「잡지언론의 개혁방향」을 각각 발표하는 등 잡지문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를 발췌 요약 한다.

### 주간지를 신문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

정진석—언론기업이 지나치게 팽창하면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언론기업이 대형화하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매부수를 늘려야 하고 광고의 물량도 많아져야 한다. 오늘날은 잡지사의 규모가 기본적으로 커졌으며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잡지 발행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형편이다. 이와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의 잡지계도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문사 발행이 아닌 독립된 소규모의 잡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잡지와 신문은 초기에 계몽적 성격과 민족주의사상을 목표로 삼았다. 1910년대의 무단정치시기에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잡지계가 30년대로 넘어서면서 신문사 발행의 잡지들이 잡지계의 주류를 장악하게 되고 잡지의 상업주의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60년대 이후 신문사가 발행하는 월간지와 주간지가 잡지계의 판도를 장악하자 독립된 월간지만을 발행하던 잡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신문사에서 발행한 잡지는 전국각지의 판매망, 신문사 제호가 주는 이미지상의 이점, 선전·광고로 개별 잡지사보다 월등한 판매부수를 올린 것이다. 신문사라는 거대한 조직을 배경으로 하는 종합잡지는 대량판매를 전제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대량생산체제의 상품이기 때문에 독자확보를 위해 센세이션리듬에 빠지기 쉬운 문제점을 나타냈다.

한편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잡지가 발행되고 있는데, 중앙의 종합잡지가 갖지 못하는 장점을 살린다면 지방발행잡지의 장래도 결코 어둡지 않다.

하지만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잡지의 정의를 월간 이하로 한정하기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주간잡지가 신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그릇된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새 정부출범과 함께 우리의 잡지도 위상을 재고해야 한다며 그 방편으로 음브즈맨제도의 도입과 독립된 잡지윤리위원회의 설치, 잡지 발행부수 공개의 제도화 등을 건의했다.

때문에 주간과 격주간은 잡지가 아니라 신문으로 분류되는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다. 서양에서는 주간으로 발행되는 잡지가 잡지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시사잡지와 전문지들의 대다수가 뉴스를 요약하고 분석하는 잡지형태로 발행되고 있고, 그 부수 또한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간지들이 성공을 거두는 것이 60년대 중반 이후였고 행정상으로 주간지를 잡지의 범주에 넣지 않고 신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언론통제를 위한 행정상의 편의에서 비롯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주간지를 잡지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잡지에 대한 통계를 내는데도 혼동과 불합리한 점이 많다. 현재 잡지형태로 된 주간지는 319개나 되며 이 가운데는 신문사들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인 「주간조선」 「뉴스메이커」 「주간한국」 「주간매경」 등과 독립된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처럼 대표적인 주간지들이 행정상으로는 신문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 경우 오늘날의 잡지는 대기업으로 합병되거나 전문화로 가는 두 가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일간지들이 종합잡지의 판도를 장악하고 새로운 잡지를 창간하고 있다. 독립된 잡지들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발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잡지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음브즈맨제도 도입해야 한다”

이광재—언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변화를 맞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이 권력과의 관계



한국잡지협회가 개최한 제13회 잡지세미나.

에 있어서 정부를 감시·비판·견제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문민정부가 새로 출범한 이후 언론계도 예외없이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다. 문민정부는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의 희생,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개혁조치를 강조하는 바,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 ▲언론의 사회적 기능 제고를 출범과 함께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1일 오인환 공보처장관이 김영삼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앞장서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는 것이 언론시책의 기본목표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는 언론의 자유영역 확대와 발전지원, 정부시책 정보의 적극적 공개관행 정착, 언론자유에 조화되는 사회적 책임 제고를 제시했다.

정부의 대언론정책에 비추어 볼 때 잡지언론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정부의 사이버언론 단속과 잡지언론인들의 자정 노력의 결과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건수와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중재신청건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지만 잡지언론계에도 신문이나 방송과 마찬가지로 보도, 경영, 광고, 내용, 잡지언론인의 자질, 자정능력 등 여러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들은 과당·과열경쟁, 잡지발행부수의 미공개, 불건전한 광고 게재, 광고수수경쟁 심화,

전문잡지인력의 부족, 여성잡지들의 과열경쟁 등이다. 금년만 하더라도 지난 6개월 동안 695개의 정기간행물이 새로 창간되고, 330개가 폐간되는 경향도 문제점이다.

새 정부의 언론정책방향은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조화인 바 잡지언론은 몇가지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잡지언론인의 의식개혁을 통한 잡지 언론철학의 정립과 잡지언론인의 전문성이 제고 야 한다.

또한 잡지언론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도의 부정확성, 논평의 불공정성, 오락의 불건전성, 광고의 불신뢰성, 광고수수 및 판매·경영상의 비리와 비윤리성 등으로 인해 잡지는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신용훼손, 미풍양속저해, 청소년교육의 악영향을 미치는 불상사를 일으키고 그 결과로 여러가지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신문 등 다른 매체가 활용하고 있는 음브즈맨제도의 도입을 건의한다.

잡지의 위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는 독립된 잡지윤리위원회의 설치이다. 지금도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잡지의 각종 심의를 담당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자율규제 의지를 가진 잡지윤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언론이 수용자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잡지도 이제는 잡지발행부수를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잡지는 내용을 갖고서 독자와 광고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수가 많지 않아도 독자의 영역이 분명하면 광고주는 반드시 관심을 갖게 된다.

—이성수 기자